

# 소득빈곤의 동태 분석

*Dynamic Analysis of Income Poverty in Korea:  
Evidence from Korea Welfare Panel Data, 2005~2009*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5차 복지패널 조사가 이루어진 2005~2009년에 대하여 소득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이동성 또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진입률은 일정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 빈곤 또는 장기빈곤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1. 서론

최근 들어 분배구조의 악화,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낮아졌음을 재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 중에서도 소득 이동성의 정도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과제와 관련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득이동성이란 '사회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척도' 혹은 '기회균등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라고 보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한 사회의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동일한 소득불평등도

를 가진 두 사회에 있어서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하여 소득이동성이 더 높다면 구성원들은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를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득이동성을 '경기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소득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는 것인데, 이 경우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복지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빈곤의 동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는 빈곤의 동태적 지위 분석을 통하여 빈곤경험가구의 특성이나 빈곤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분석으로부터 현실에 기

반을 둔 빈곤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회의 빈곤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단위(가구 또는 개인)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소득개념(시장소득 또는 가처분소득 등)을 이용할 것인지, 어떤 빈곤개념(절대빈곤 또는 상대빈곤)을 이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라 분석결과와의 약간씩의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여기서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고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의 동태적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 2. 연구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6차 조사가 완료되었다.<sup>1)</sup> 현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는 1~5차까지 조사된 자료인데, 2006년의 1차 조사년도에 7,072가구를 원표본으로 출발하여 5차년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계속하여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총 5,637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도 1~5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를 분석에 이용하였다.<sup>2)</sup>

복지패널은 1차년도 경상소득의 중위수를 기

준으로 하위 60%에 속하는 가구에 대하여 표본의 절반(50%)에 해당하는 3,500여 가구를 할당하였다는 점에 조사의 특징이 있으며, 빈곤과 불평등 분석에 특별히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에 관한 분석을 하는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소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소득을 나누어서 균등화된 소득을 계산하였으며, 패널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5차년도 가중치를 이용하였다.<sup>3)</sup>

빈곤분석을 위해서는 시장소득(market income)과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각 소득간의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경상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사업 및 부업소득} + \text{재산소득} + \text{이전소득} \\ \text{총소득} &= \text{경상소득} + \text{비경상소득(퇴직금, 경조비 등)} \\ \text{시장소득} &= \text{경상소득} - \text{공적이전소득} \\ \text{가처분소득} &= \text{경상소득} - \text{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 \text{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 \text{경상소득} - \text{공공부조} \end{aligned}$$

1) 남상호 외(2011), 2011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조사시점과 조사대상연도에는 차이가 있음. 가령 1차 조사는 2006년에 이루어졌는데, 2005년의 소득을 조사하였음. 여기서는 조사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05년으로 표기한 수치는 2006년에 이루어진 1차 조사를 의미함.

3) 대부분의 경우 미시자료들은 분석에 앞서 특이항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를 함. 여기서는 Luxembourg Income Study Group의 방법과 유사하게 각 년도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에 대해 하위 1% 미만과 평균의 10배가 넘는 값에 대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경계값으로 대체하였으며, 균등화된 소득변수에 적합한 가구가중치를 이용하여 통계량을 계산하였음.

빈곤율은 전체 가구에 대한 빈곤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빈곤가구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poverty line)으로는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 MCL) 수준이나 중위소득의 40%, 50%, 또는 60%를 주로 사용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빈곤', 그리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빈곤'이라고 한다.

빈곤탈출률은 '특정 시기에 빈곤선 이하였던 가구가 그 다음 시기에 빈곤선 위로 이동할 확률'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빈곤진입률은 '특정 시기에 빈곤선 위에 있던 가구가 그 다음 시기에 빈곤선 아래로 이동할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보통 빈곤진입률이 빈곤탈출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각 정의식에서 사용되는 분모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기간 이상의 서로 연결된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이 함께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면 소득이동성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한다.

다음의 <표 1>은 복지패널 1~5차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우리나라의 절대 및 상대 빈곤율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사용하였고, 절대빈곤기준선은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이 절대빈곤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5년의 20.3%에서부터 완만하게 낮아져 2009년에는 17.5%에 이르고 있다. 또 균등화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5년 14.4%, 2006년 11.5%에서 점차 낮아져서 2009년 8.2%에 이르고 있다(강신욱 외, 2011).

빈곤은 지속기간에 따라 단기빈곤과 장기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빈곤은 당해연도에만 빈곤선 이하에 위치한 경우를 말하고, 장기빈곤은 두 기간 이상 연속하여 빈곤가구에 잔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기빈곤가구와 장기빈곤가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

표 1. 빈곤율 현황(2005~2009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대빈곤율(0.5*중위소득)					
- 경상소득	20.7	20.2	20.0	19.1	18.5
- 가처분소득	20.3	19.7	19.3	18.6	17.5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 경상소득	13.2	10.3	8.9	8.1	7.4
- 가처분소득	14.4	11.5	9.9	9.1	8.2

주: 1) 복지패널 1~5차 연결자료(N=5,637)로 분석하였으며, 5차년도 가구가중치를 중간가중치로 사용함.  
 2) 상대빈곤율의 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하였음  
 자료: 강신욱 외(2011), 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가구가 장기빈곤 가구에 속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빈곤의 지속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의 상대적 위치나 절대기준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에 빈곤선이하에 위치한 가구가 내년에도 반드시 빈곤가구가 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sup>4)</sup> 그러므로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의 개념적인 구분은 일관성 있는 빈곤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정책의 수혜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정보만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주로 장기빈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각 시점에서의 가구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빈곤정책은 빈곤가구에 대하여 빈곤기준선에 미달하는 만큼의 소득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단기빈곤 완화대책으로 사용된다. 반면 소득이동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장기빈곤 대책이 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소득이동성(또는 소득이동 경직성)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소득이동성 정도를 측정해 본다.

### 3. 소득이동성 분석

#### 1) 상관분석

소득이동성의 정도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중 가장 단순한 것은 기준년과 비교년의 소득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는 두 기간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가구소득만을 대상으로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얻어진 상관계수 값의 범위는 0과 1사이인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동성이 크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동성이 작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2>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주대각선 위쪽의 수치는 기준년과 비교년 모두 소득이 관찰된 가구로부터 얻어진 소득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과 2008년의 소득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하면 0.506이 되고, 2006년과 2009년 소득의 상관계수는 0.606이다. 인접한 두 해를 비교하였을 때 소득의 상관계수는 0.615~0.675 사이의 값을 가진다. 2005~2006년 기간에서의 상관계수가 0.615로 가장 작으므로 소득이동성이 가장 큰 반면, 2006~2007년에서의 상관계수가 0.675로 가장 커서 이 기간에서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년의 차이를 두고 측정된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2005~2007년의 이동성이 가장 높은 반면,

4) 빈곤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와 새로이 빈곤가구로 진입하는 경우 모두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의 연구대상에 속함.

2007~2009년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으로 올수록 상관계수가 높아지고 있어서 (0.572 → 0.614 → 0.640) 소득이동성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3년의 차이를 두고 측정한 이동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 2) 회귀분석

다른 방법으로는 비교년의 로그소득과 기준년의 로그소득을 이용하여 scatter plot을 그려볼 수 있다. 의 에 대한 회귀식의 기울기가 소득이동성의 척도가 되며, 만일 기울기가 0에 가깝다면 소득이동성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표 2>의 주 대각선 아래의 수치는 회귀식의 기울기 추정치를 나타낸다. 인접한 두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2005~2006년은 0.579, 2006~2007년은 0.662, 2007~2008년은 0.644, 그리고 2008~2009년은 0.595로 나타나, 첫 기간을 예외로

본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회귀선의 기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최근년으로 올수록 소득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5~2007년 및 2006~2008년의 경우에는 인접한 연도(2005~2006년 및 2006~2007년)의 추정치에 비하여 회귀식의 추정치가 더 높아지고 있으나, 2007~2009년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시점간 격차가 커질수록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단조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sup>5)</sup>

## 3) 이행행렬 분석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소득이행행렬(income transition matrix)을 통하여 상대적인 이동성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기준년과 비교년의 소득을 그룹별로 5분위(또는 10분위)로 구분한 다음, 기준년의 각 분위에서 비교년도의 각 분위로 얼마나 이동하

표 2. 상관계수와 회귀계수의 비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b>1.000</b>	0.615	0.572	0.506	0.539
2006	0.579	<b>1.000</b>	0.675	0.614	0.606
2007	0.528	0.662	<b>1.000</b>	0.632	0.640
2008	0.476	0.614	0.644	<b>1.000</b>	0.667
2009	0.452	0.541	0.583	0.595	<b>1.000</b>

주: 주대각선 위쪽은 상관계수, 아래쪽은 회귀계수의 추정치를 각각 나타냄.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5) 예외적으로 2005년을 시작점으로 하는 경우에만 시점간 격차가 커질수록 회귀계수의 추정치가 단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좀 더 자료가 축적되면 시점간 격차와 이동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두 기간에 있어서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을수록, 또 최초의 소득분위에서 더 먼 소득분위로 이동한 사람들의 비율이 많을수록 소득이동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sup>6)</sup>

다음의 <표 3>은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을 이용하여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소득분위별 소득이동을 살펴본 것이다.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물러 있는 비율은 소득 5분위가 59.2%로 가장 높고, 1분위가 59.0%로 그 다음을 이었다. 동일 소득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이 가장 낮은 분위는 소득 3분위와 4분위인데, 그 비율은 34.6%와 36.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분위는 5분위인데, 40.7%가 1~4분위로 하방 이동하였다. 이들 하방이동 가구 중에서도 55.5%는 소득 4분위로 이동하였고, 26.5%는 소득 3분위로 이동하였다. 4분위에서는 39.3%

가 하방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동한 가구 중 63.4%는 인접한 3분위로 하방이동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위의 경우 인접분위로 상방이동한 비율(24.5%)과 인접분위로 하방이동한 비율(24.9%)이 가장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3분위 소득계층이 하방으로 이동한 비율은 24.4~34.6%이었고, 이들 소득계층에서도 인접한 소득분위로 하방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에서 상방으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41.0%이며, 이동한 가구 중 약 57.3%는 소득 2분위로 이동하였다. 소득 2분위 및 3분위 가구 중 상방 이동한 비율은 38.9%와 30.3%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비로 위의 소득분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4분위에서 5분위로 상방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24.5%이지만, 하방으로 이동한 가구는 39.3%로 더 많았다. 2~4분위에 걸쳐서 인접한 소득분위로 이동하

표 3. 소득 5분위별 이행행렬(2005 vs. 2009)

(단위: p)

2005 \ 2009	I	II	III	IV	V	전체	불변	하락	상승
I	0.590	0.235	0.090	0.058	0.027	1.000	0.590	-	0.410
II	0.244	0.366	0.208	0.139	0.042	1.000	0.366	0.244	0.389
III	0.092	0.254	0.346	0.214	0.094	1.000	0.346	0.346	0.308
IV	0.045	0.099	0.249	0.363	0.245	1.000	0.361	0.393	0.245
V	0.028	0.045	0.108	0.226	0.592	1.000	0.592	0.407	-
평균	0.200	0.200	0.200	0.200	0.200	1.000	0.451	0.348	0.338

주: 수치는 가로 비율임.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6) Van Kerm, P., 2002. "Tools for income mobility analysis," Dutch-German Stata Users' Group Meetings 2002, Maastricht.

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 4분위의 경우 상방 이동보다 하방 이동 비율이 더 높아서 그 차이가 14.8%p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 2분위의 경우는 상방이동 비율이 하방이동 비율보다 높고, 그 차이는 14.5%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 3분위의 경우에는 상방 및 하방이동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 4. 빈곤 진입과 탈출

특정시기에 빈곤에 머무르던 가구가 다음 시기에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을 빈곤탈출률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특정시기에 빈곤선 위에 있던 가구가 다음 기에 빈곤선 아래로 진입하게 될 확률을 빈곤진입률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중위수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보고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추이를 살펴본다.<sup>7)</sup>

표 4. 소득이동성의 요약(2005~2009년)

(단위: p)

최초 소득분위	하방이동	상방이동	인접이동	그 외 이동		계	
				상방이동	하방이동		
I	-	0.410	0.235	0.235	-	0.175	1.000
II	0.244	0.389	0.452	0.208	0.244	0.181	1.000
III	0.346	0.308	0.468	0.214	0.254	0.186	1.000
IV	0.393	0.245	0.494	0.245	0.249	0.144	1.000
V	0.407	-	0.226	-	0.226	0.181	1.000
평균	0.348	0.338	0.375	0.226	0.243	0.173	1.000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표 5. 빈곤진입률과 빈곤탈출률 추이

구분	2005~2006년	2006~2007년	2007~2008년	2008~2009년
빈곤진입률				
- 경상소득 기준	7.3	6.5	7.0	6.7
- 가처분소득 기준	7.7	6.9	7.3	6.7
빈곤탈출률				
- 경상소득 기준	32.6	44.0	29.3	28.8
- 가처분소득 기준	35.4	33.2	31.1	31.3

주: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이용함.  
 자료: 강신욱 외(2011), 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상소득으로부터 구한 빈곤진입률은 2006년 7.3%, 2007년 6.5%, 2008년 7.0%, 그리고 2009년 6.7%로 나타나, 6.5~7.3%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진입률은 경상소득의 경우보다 조금 더 높으며, 6.7~7.7% 구간에서 경상소득 기준의 빈곤진입률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탈출률을 살펴보면 경상소득의 경우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6년의 32.6%에서부터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가처분소득의 경우도 경상소득의 경우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2006년의 35.4%에서 점차로 낮아져 2008년 31.1%, 2009년의 3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빈곤그룹으로의 진입가능성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빈곤그룹에서 비빈곤그룹으로의 탈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소득이동성(또는 소득이동 경직성)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복지패널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5년 동안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빈곤진입률은 일정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이동성 또한 점차 낮아지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반복빈곤 또는 장기빈곤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 1분위의 상방 이동을 돕는 방안과 2분위 소득계층이 1분위 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의 급증, 저출산 및 만혼 또는 이혼으로 인한 1~2인가구의 급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향후 정책당국이 빈곤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소득보조를 통한 일시적 빈곤탈출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빈곤가구가 장기적 소득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데 복지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다양한 외부적 충격이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나이 그 자체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와 연계를 통한 정년연장 등의 제도 도입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건  
복지

7) 빈곤기준선을 낮게 책정할수록 빈곤탈출률이 높게 나타남.